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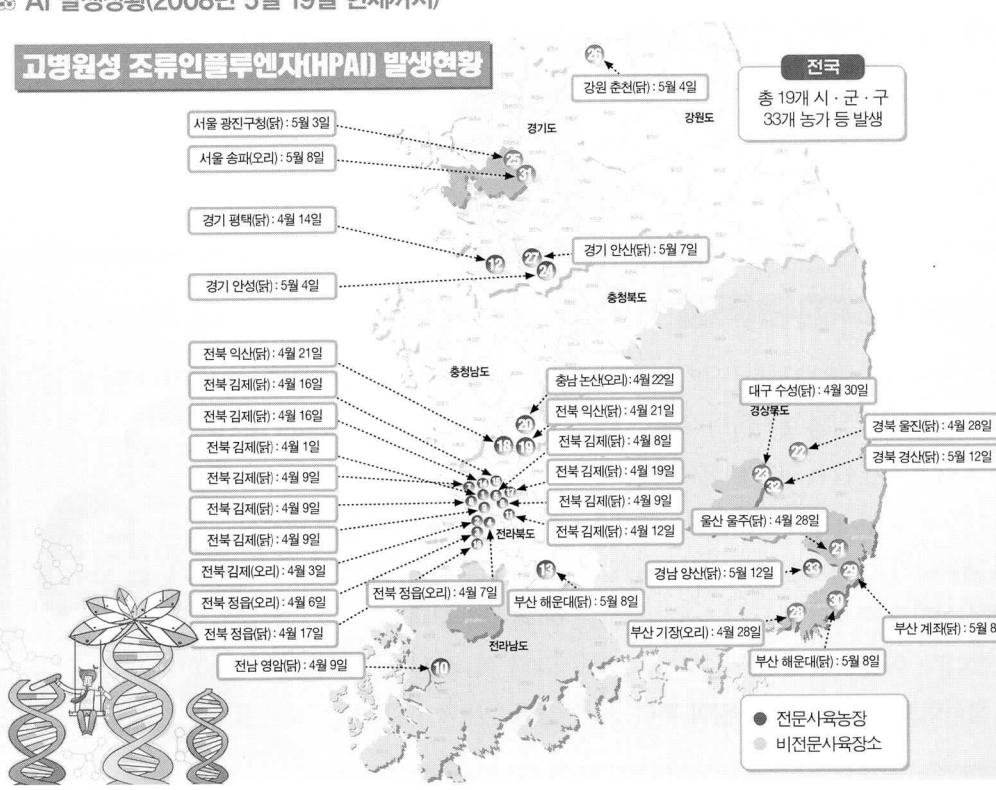
조류인플루엔자(AI) 방역

추진상황(推進狀況) 및 계획(計劃)



⑧ AI 발생상황(2008년 5월 19일 현재까지)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5N1) 발생현황



■ 전국 19개 시·군·구 33곳에서 AI 발생, 검사중인 건 없음(7,816천수 살처분)

- 2008년 4월 1일 전북 김제 최초 발생 이후 약 1개 월간은 전문 사육농장에서 발생하였으나, 최근에는 추가 발생 없이 진정 국면
– 전문 사육 농장 발생형: 전북 김제(4월 1일) · 정읍(4월 3일) · 순창(4월 14일) · 익산(4월 21일), 전남 영암(4월 9일), 충남 논산(4월 22일), 경기 평택(4월 14일) · 안성(4월 4일)
- 2008년 4월 28일 울산 울주 발생부터는 전문 사육 농장이 아닌 소규모 사육 가든식당, 가정집 동물사 등에서 발생
– 비전문 사육장소 발생형: 울산 울주(4월 28일), 경북 영천(4월 28일), 대구 수성(4월 30일), 서울 광진(5월 3일) 강원 춘천(5월 3일)
※ 일본 아키타현(4월 25일)과 훗카이도 베카이초(5월 5일) 호수 주변에서 죽은 백조 H5N1 확인

■ 국내 확산요인 및 경로(추정)

- 전문 사육농장: 사료회사 차량, 출하 유통업자, 닭 수송차량 등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
- 소규모 비전문적 사육장소: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가금산물이나 영세수집상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

■ 오리고기·닭고기 소비가 대도시인 서울 광진구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심리로 급격히 감소, 가격도 하락세(下落勢)

■ 그간 주요 조치사항

■ 전남북에 이어 경기 평택까지 발생함에 따라 전국 규모로 확산될 조짐이 있어 4월 14일 긴급 심야방역 회의를 개최

- AI 주요 감염원인인 전국 오리농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, 잠복기 감염 원인체를 미리 색출해 내기로 함
- 전국 오리농장(408농가) 일제검사를 9개 수의과대

■ 학과 공동으로 실시

- 확인검사 총 66건 접수, 59건 검사완료(고병원성 1건, 저병원성 12건, 음성 46건)
- 오리농장 검사 확대를 위해 수의과대학 외 지방 가축위생시험소를 포함, 검사하는 방안 마련 중
- 지자체 농·축협 및 축산단체 등이 분담하여 농장 예찰 전담제 도입, 전국 닭·오리 농장에 1일 1회 이상 전화 확인
- 매물처분 장소(350개소) 텁밥·생석회 뿌리기, 소독 등 관리 강화

■ 이와 함께 발생하면 대응하는 시스템에서 연중 상시 능동적인 예찰을 하는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시(4월 14일)

- 5월 13일까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연구용역 추진

■ 4월 28일 울산 발생부터 경북·대구 등 도시 재래시장을 통해 소규모 농장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재래시장과 가금류 운송차량에 예방적 방역조치 실시

- AI가 발생한 재래시장 4곳(칠성·모란·화천·경산)에 토종닭·오리 등 공급 농장 예찰, 이동제한, 살처분(24개소, 10천수) 조치
- 5일장(392개소) 가금류 판매행위 제한, 불법 도축 단속(5월 1일~)
- 상설시장(67개소) 방역소독 및 현장 점검 · 검사 실시(시·군)
- 이동사육장인 운송차량(300여대)에 대해 인근 오리·닭 도축장 내 세척·소독시설에서 주1회 이상 세척·소독 실시 독려
– 세척·소독 확인 시만 농장 출입 허용토록 조치
- ※ 재래시장·운반차량 등 일제단속(5월 14일): 재래시장 35개소(위반사례 없음)

4 순수 도시지역 실정에 맞는 AI긴급행동지침(SOP)

설정(5월 8일)

- 발생장소 가금류 살처분, 해당 지자체가 종합검토 후 발생지역 반경 500m내 살처분 여부 결정
 - 위험지역 · 경계지역 방역대 설정여부는 지자체가 방역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결정
- 관내 조류 사육시설과 판매장 소독 · 점검 · 예찰 실시 강화
- 비발생 도심지역도 소독, 전화예찰, 임상검사 등 예방조치 추진 및 운반차량 세척 · 소독 강화

5 친환경 오리농법 자체 및 다른 친환경 농법으로

전환 권장

- 오리농법 농가(4,495호)에 AI 예방수칙 지도 홍보 조치(5.15)

6 살처분 등 피해농가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 정산

후 지원시스템에서 선 지원 후 정산시스템으로 전환

- 매몰처분 보상금 452.4억원을 배정하여 농가에 171억원 선지급
 - ※신란계, 육용오리 보상금 지급단기를 사료값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상향조정
- AI방역조치 지역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(9억원)
- 4.19일부터 가금산물 수매 실시(1,453천수)

7 오리고기 · 닭고기 소비 활성화 도모

- AI 배상책임보험(20억원) 홍보 등 소비자 불안심리 최소화
- 신문에 AI 안전성 광고 및 신문사와 안전성 캠페인 실시(4월 29일~)
- 가금류 안전성 홍보물 제작, 치킨점 · 음식점 등에 비치 · 배부(5월 7일~)
- 소비자 · 생산자단체, 업체, 정부 합동 소비촉진 홍보 실시

- 부처, 지자체, 교육청, 소비자단체 등에 소비확대 협조 요청
- 오리데이 등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여 소비확대 도모

8 이러한 확산방지 노력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응 미숙, 일부 규정 미흡 등 AI확산을 막는데 일부 한계를 노출하였음

- 이동제한 통제가 철저하지 못해 중간 수집상이 경계지역 밖으로 오리 · 닭을 유출함에 따라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빌미 제공
 - 4월 12일 김제 가든형 식당에서 11번째 발생한 AI가 기존 발생 지역 농장(126개소)에서 오리 · 닭을 수집하여 전남 북과 충남의 가든 식당에서 닭집(115개소)에 판매한 수집상(2명)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이동통제가 허술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음.
- 농장방역에만 신경을 써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토종닭 · 오리 거래 재래시장과 이 곳에 공급하는 차량에 대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도시지역 가든 식당, 동물사까지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음.

▣ 향후 조치계획(向後措置計畫)

1 방역활동 및 예찰 강화

- ▶ 전국 육용오리 검사 확대 실시, 잠복기 감염 원인체 색출
- 발생지역으로 검사를 보류했던 전남북 포함(260 …→ 408개소)
 - 1차 검사(5월 31일 종료 예정) 결과를 분석한 후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연중 검사시스템으로 전환
- 전국 오리 · 닭 농장에 1일 1회 이상 전화예찰 지속 실시
- 톱밥 · 생선회 뿌리기 및 주변 소독 등 매몰처분 장소 오염 방지

▶ 재래시장과 가금류 운송차량 방역강화

- 시장과 업소 소독 · 점검 · 검사, 출입 차량소독 등 지속 실시

- 오리·닭 도축장 경영자가 발행한 “소독실시기록부”가 없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적용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경찰 협조 길거리 단속)

▶ 순수 도시지역 방역 및 예방활동 강화

- 조류 사육시설 전화예찰 및 소독, 애완용 조류 판매점 소독·점검·검사, 발생지역 애완용 조류 구입자제 요청
-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(어린이 대공원 인체감염 우려 등)로 인해 국민 불안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

▶ 오리·닭 도축장 관리 강화

- 가축방역관을 도축장(60개소)에 파견, 현행 도축장 자체검사 제도 보완 및 방역이행 상황 확인강화
- 향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(현재 205명)을 증원하여 도축장에 배치, 체계적인 검사체계 구축

▶ AI 진정시까지 오리·닭 분뇨의 사육시설 밖으로의 반출 제한

- 계분 비료공장 등 출입차량에 대하여는 비료제조 업자가 해당차량에 대해 소독 후 기록해 준 “소독 실시기록부”를 점검

② AI 상시 방역 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

▶ AI 상시방역체제로 전환, 연중 방역실시

- 상시 능동적 예찰시스템 구축,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
- 시·도 가축방역기관도 약성 가축전염병 검사시스템 도입, 오리·닭 농장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도록 뒷받침
 - (현행) 408농가 → (확대) 1,829농가(5.19~6.30, 20수 이상 사육농가)

▶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재래시장·가든식당 등에 대

한 제도개선

- 살아있는 오리와 닭을 소비자나 유통상인에게 판매금지
- 가든식당 등에서 가금류에 대한 자가 도축 금지
- 가축 유통 상인 및 이동 사육장인 수송차량 등록제 도입
- 전국 상설 오리·닭 판매 재래시장(83개소) 자진폐쇄 유도
 - (현행) 일일소독·점검 및 시료채취 정밀검사
 - (강화)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AI 진정시까지 자진 폐쇄 유도

▶ 친환경 오리농법 시행자제 및 오리농법이 시작되는 6월 초부터 오리농법에 투입된 오리의 자제 협조 및 주기적 점검(검사)

- 대상 : 4,495농가, 50여만 마리

③ 가금산업의 조기 정상화 적극 뒷받침

- ▶ 발생지역 농가·업체의 경영안정지원 차질 없이 추진
- 농가에 살처분보상금, 생계·소득안정자금 조기 지급 완료
- 이동제한 지역내 체화된 가금산물 정부수매 조기 완료
- 발생지역 축산농가 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
- AI 상황 종료 후, 살처분 농가가 재입식시 소요자금 응자 지원
- 업체의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 감안, 경영안정자금 응자 지원

▶ 오리고기·닭고기 소비 활성화 대책 추진

- KBSTV, 신문등에 AI 안전성 광고 실시, 리플렛 배포
 - 오리고기, 닭고기, 계란 PPL 광고도 실시
- 소비자·생산자단체, 유통업체와 연계, 시식회 행사를 개최